

4월 주요 시사

I. 주요시사 핵심내용

II. 시사 파헤치기

I. 주요시사 핵심내용

■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FSAP)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금융 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취약점을 미리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IMF와 세계은행(WB)이 1999년 공동으로 도입했다. 평가 주기는 각 회원국에 대해 매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올해 중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FSAP 평가 예정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이번이 2003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평가인데 2013년 평가에서 미준수 평가 점수를 대거 받은 적이 있다.

■ 윈도우 헬로

윈도우 헬로는 얼굴 형태나 사람의 손가락 지문 또는 사람 눈의 홍채 등을 이용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10 운영체제가 설치된 기기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체인증 보안 기능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인 아누쉬 사부리는 “윈도우 헬로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동작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FIDO(Fast identity Online)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인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원을 도난 당할 확률이 높은 암호 등을 필요 없게 만들어 윈도우 10의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명에 따르면 윈도우 헬로를 활용 시 암호를 기입하는 형식보다 3배 빠르게 윈도우 장치에 로그인 할 수 있다.

■ 녹색갈증

녹색갈증은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생명체의 당연한 본능이라는 개념이다.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자연의 순리에 맞춰 설계돼 있는데, 도시 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살다 보니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윌슨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을 일컬어 녹색갈증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인 ‘동네 숲(골목길) 가꾸기 사업’과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 제안 사업’에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채용 직무능력 비중 ↑

많은 기업이 현재는 많은 민간기업에서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NCS 품질관리 혁신을 통해

능력중심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에서 수리, 정보, 문제 해결과 같은 '직업기초능력평가' 비중을 낮추고,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 보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비중을 높인다. 또 전기산업기사와 제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와 실기 위주의 검정형에서 훈련과정 중심 평가인 NCS 기반 과정평가형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에 맞는 다양한 표준을 발굴하는 등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4차 산업시대 소프트웨어 교육 열풍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신기술'이다. 이 기술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내 30여 개의 대학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됐는데,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를 배우는 과목이 다양하게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영역에 이미 소프트웨어가 깊숙하게 자리 잡으면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영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교육혁신팀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직접 구현해보는 창의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소프트웨어는 그 경쟁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연내 100 개 승인 목표'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 월 17 일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100 일을 맞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모두 26 건이 승인됐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 걸리는 해외 사례보다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20 여 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심사하고,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1 호 과제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고,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 등이 대표적이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처리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를 정비해 시장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 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급증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4년 사이 50% 이상 급증

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갱신 적성 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갱신 전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다. 여기에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은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진 반납한 운전자는 7천346명,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올 들어 청년고용지표 개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8 천 7 백여 곳으로 이들 기업은 장려금을 활용해 5 만 3 천여 명을 추가 채용했으며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 올해 1 분기 신규 가입자는 3 만 4 천 54 명으로, 작년 한 해의 32%에 달했다고 밝혔다.

■ 원전해체 세계 TOP5 목표

정부가 원전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원전해체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2020 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늘어나는데 따라 건설·운영에 한정된 국내원전산업을 확장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53 기, 영구정지된 원전은 170 기에 달한다. 가동 원전 중 30 년 이상 된 원전이 68%에 달해 해체 수요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원전해체는 경험이 중요시되는 산업이기에 내년 고리 1 호기 해체를 발판으로 국내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리 1 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3 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세웠으며 2020 년대 중반 선진국 단위사업을 수주하고, 후반에는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 3 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을 도모한다고 한다. 2030 년대 이후에는 대만, 체코 등 제 3 국 단독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 2019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의 전망치를 중심으로)

○ 국내

- **정부** - 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2.6~2.7% 달성을 내걸었으나, 추경 편성 없이는 목표치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 IMF(국제통화기금) 측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0.5% 가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9조원 수준을 권고한 바 있음
- **한국은행** - IMF, OECD와 같이 한국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4월 들어 2.5%로 0.1%p 하향
- **국회예산정책처** -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

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2.7%(‘18.10)에서 2.5%로 내려 잡음(‘19.4). 대외 리스크 요인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로 나빠지면 성장률이 2.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국책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전년(2.7%)보다 소폭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민간 경제연구원** -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부문 증가세 둔화로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5%, 한국경제연구원은 2.4%로 전망치를 각각 하향
- **증권사** - 국내 증권사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2.5%보다 낮은 2.48% 수준(연초 에프앤가이드가 집계)

○해외

- **IMF** - 국제통화기금(IMF)은 ‘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행 2.6%를 유지
- **OECD**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전망치를 2.8%(‘18.11)에서 2.6%(‘19.3)로 낮춤
- **ADB**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 (‘18.9)에서 2.8%(‘18.9)로 낮춘 데 이어 2.5%로 하향 조정(‘19.4)
- **국제 신용평가사** -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5%에서 2.4%로 하향 조정
- **글로벌 투자은행** - 캐피털 이코노믹스 2.0%, ING그룹·도이체방크가 2.3%, 스탠다드차타드·소시에테 제네랄·노무라·크레디트위스·씨티은행은 2.4% 성장을 전망
- **시장조사기관** - IHS마킷은 연평균 1.7% 성장을 전망해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음

· <참고자료: 아젠다넷>

■ 2025년까지 차세대중형위성 3기 개발·발사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천여억 원을 투입해 500kg급 중형위성 3기를 개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2023년 발사를 목표로 올해부터 1천16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중형위성 4호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2021년, 한국형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개발이 시작되고, 해상도 2022년부터 10m급 C-밴드 영상레이다로 하천관리와 해양환경 감시 등을 할 5호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II. 시사 파헤치기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

○ 개요 및 현황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현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2012년 8월, 현재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현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1항이 최종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3명이 단순위헌/2명은 합헌)

-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
-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
-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과는 달라, 현재가 규정한 기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됨

○ '낙태죄'에 대한 찬성측 논리 - 태아의 생명권 인정여부

-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 법무부와 종교계 등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쪽은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을 주장하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것을 우려
-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이 존재해 낙태 처벌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 현재 합헌 의견(2명)으로 "태아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낙태죄'에 대한 반대측 논리 -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 등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한다는 입장
- 원치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이 강제됨으로써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이 훼손되며,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가 평등권을 침해함.
- 관련해 금번 현재 단순위헌 의견(3명)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

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음

<참고자료: 아젠다넷>

■ 두발자유화, 개인의 자유인가?, 필요한 규제인가?

○ 개요 및 현황

두발자유화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의 길이, 모양 등을 제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발자유화를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해 9월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 두발규제 철폐를 권고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4.16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학교장이 학생용모를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생활지도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초중고 두발규제 폐지와 함께 통제보다는 자율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용모 관련 교칙이 있어야 면학 분위기가 유지되고 교권과 학습권이 보호된다고 밝히며 용모 근거 조항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찬성 측 논리 –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침해

두발 규제는 일제의 잔재라고 할 만큼 역사가 길다. 하지만 최근 학생 인권존중과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폐지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두발 규정 관련 교칙은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도 교육이다라는 의견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헤아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외모에 민감한 학생 시절에는 원치 않는 통제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머리길이, 색, 화장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는 별로 없는 만큼 학생의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반대측 논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 순탄한 단체생활과 학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사라져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의 자율도 중요하지만 단체생활에서 규율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교육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두발 규제는 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 외모꾸밈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과 함께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외모 비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의 자기결정권만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학교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학교 규

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관계자가 공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2019.0422 / 중앙일보 2019.0422, >

■ 범죄자 신상 공개 논란

○ 개요 및 현황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또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신상공개 기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8조 2항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측 논리 -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등 공익적 기능

- 범죄 예방 효과에 도움
- 잠재적 범죄인에게 심리적 압박은 가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성범죄자 알리미-e’를 통해 주변 지역에 범죄자가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어 범죄 예방.
- 징역이나 전자 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함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찬성 87.4%, 반대 8.9%, 모름 3.7%
- 신상정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불안감 해소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해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피해자의 인권과 공익보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판단
- 공리주의: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해 개개인의 선의 합을 더해 이익을 살펴본다면, 범죄자 가족이 받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보다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피해,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입장까지 고려되어 신상공개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재범 확률이 높음 – 상습적인 범죄 행위
-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범죄자의 얼굴을 목격 후, 바로 신고 가능

○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측 논리 – 범죄자 인권 보호

-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함
-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긴 하나 범죄 예방은 실효성은 별로 없고 부작용이 더 크다
- 경찰청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1년, 6855건의 범죄 발생.
2007년은 8732건의 발생. 27%의 범죄가 늘어남
- 신상공개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
- 이미 신상이 공개되어 더욱 건잡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
- 신상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형량을 높이자(형평성 문제)
-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30년의 형을 구형할 수 있으나 재판에서는 최고10년, 특히 심신미약의 경우는 낮은 형량을 주는 경우가 있음
- 재심의 기회 상실을 야기
- 사회적으로 매장된 자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밝혀져서 그의 범죄사실이 부정되는 경우, 이미 공개된 신상에 대해 돌이킬 방법이 없다. 이는 재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야기
- 범죄자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행복추구권)
-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 대안

- 찬성-형량 늘리기/공소시효폐지/화학적거세
- 반대-범죄가능성지역의 CCTV확대/가해자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마련